

# 계열화 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T/F팀 발족 당초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 거둘 수 있어야...



본지 김한웅 부장

계열화 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T/F팀이 지난달 29일 발족됐다.

지난 '80년대 초반 닭고기의 안정적인 수급과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영육농산, 천호 인터그레이션 등을 시발로 국내에 도입된 육계 계열화 사업은 닭고기 소비가 일반화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침도 많았다. 초기 육계 계열화 사업을 주도했던 상당수의 계열주체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무너지고 또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열화 사업은 무한한 가능성과 효율성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가는 사육에만 전념하고 계열주체가 원자재의 공급, 운송, 도축, 가공, 유통, 판매를 주도함으로써 상호 발전적인 측면을 도출해내고 보완해 나가는 관계가 유지돼 왔다.

특히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타 축종보다도 앞서서 닭고기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닭고기 산업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육계 계열화가 빠르게 진척된데 따른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정부도 지난 1985년도에 '닭 계열화 사업 촉진 정책'을 수립하면서 계열화 사업의 증흥을 유도해 왔다.

이는 투기산업의 대표주자로 지목됐던 육계산업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게 됐고 산업의 규모화·전업화도 가속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2000년 이전 농가 평균 사육규모는 1만수였으나 2009년에는 4만2천수 정도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으며 회전수도 2~3회전에서 4회전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투자도 착실히 이루어져 육계산업의 전반적인 위치를 탄탄한 반석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산업의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농가와의 갈등이 항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는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적정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닭고기 유통시장의 왜곡도 계열주체에게는 항상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운 난제이다.

과거의 경우에서도 보아왔듯이 과잉생산, 소비감소 부문은 계약사육을 하고 있는 계열주체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황에 맞게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또 그 여파는

사육농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난 계열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부족부문에 대해서는 보완 내지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업계 내에 확산되면서 '계열화 사업 발전방향' 연구용역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관계자들이 모여 연구용역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T/F팀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계열화 사업 제도개선 T/F팀을 통해 우선적으로 계열주체와 농가간 갈등 요인을 분석,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계열화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계열화 사업의 배경, 개념, 목적, 기대효과 등 계열화 사업의 이론 정립을 확실히 함으로써 육계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계열주체와 농가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계열화 사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갈 계획이다.

아무쪼록 계열화 사업 제도개선 T/F팀이 당초의 취지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K>